

KMI 동향분석

VOL.54

2017 OCTOBER

발간년월 2017년 10월(통권 제54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이상건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glee@kmi.re.kr/051-797-4597)

김연수 동향분석실 연구원
(ykim@kmi.re.kr/051-797-4489)

임경희 해외시장분석센터 센터장
(imkh@kmi.re.kr/051-797-4591)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3위 국가('16년 기준)인 미국이 2018년부터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을 실시한다. 동 제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관련 법률에 근거해 미국 정부는 정보가 불충분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2018년부터 13종 품종의 수산물에 동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데, 미국 수입업체는 대상 어종의 생산(어획·양식)부터 시작해 미국에 반 입되기까지 유통, 가공을 포함한 각 과정별 세부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출업자에게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만큼 對미 수산물 수출업체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내년부터 동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참치, 게, 새우, 해삼, 대구 등의 경우 수산업 관련 각종 허가 등록·증명서, 어획증명서, 수산물이력정보 등을 활용하면 일정 수준 이상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정보의 경우에도 업체 자체적인 거래 기록물을 활용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비계통 출하 비중이 높은 해삼, 새우 등의 경우 기록물 확보와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기 전으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의 구체성,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비·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향후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미국 수출 수산물에 대한 과정별 정보 기록 및 관리·보관 중요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럽연합도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산물 생산·유통 정보의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를 강조한 바 있는데, 미국이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규범이 국제사회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수산물 이력 추적제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수출업체의 정보 수집·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매뉴얼 작성·확산, 교육 시행을 통해 수산업계의 자발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수입 수산물에 대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

■ 미국,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원산지 세탁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미국 수입 방지 제도 도입

- 미국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하 'NOAA')¹⁾ 산하 해양어업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s: NMFS 혹은 NOAA Fisheries)이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이하 'SIMP')을 2017년 1월 9일에 발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SIMP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과 원산지 세탁(Seafood Fraud)의 우려가 큰 수산물의 미국 내 반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2014년 미국 백악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물 원산지 세탁 근절을 위한 대통령 전담반을 만들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
 - 12개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전담반이 이듬해 3월, IUU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세탁 근절을 위한 포괄적 기구 수립을 위한 15개의 제안을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함
 - 대통령 전담반은 국가해양위원회 산하 IUU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세탁에 관한 위원회(NOC 위원회)로 재편성되어 사업계획에 담긴 15개 제안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수립, 이 중 제안 14호와 15호가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2016년 12월 8일 해양대기국의 시행규칙으로 입법화됨

1) 해양대기국은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으로 미국해양어업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s: NMFS 혹은 NOAA Fisheries), 미국해양청(National Oceanic Services), 미국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미국 환경위성자료정보청(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 해양대기연구소(Office of Oceanic and Atmospheric Research) 및 해상항공작전사무소(Office of Marine & Aviation Operations)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어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어업청에서 규제하고 있음

그림 1. 미국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 경과



자료: 미연방공보(81FR88975, 2016. 12. 9.)참고하여 KMI 재작성

■ 미국 정부, 정보가 불충분한 수산물의 수입 금지 근거 마련

- SIMP는 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에 특별히 취약한 수산물의 수입의 허용, 보고, 기록물 보관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으로, 위법·위장 수산물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
-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에 근거를 둬
- 동 법률 Sec. 1857에서는 국가 간 혹은 외국 무역에서 외국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구속력 있는 보전 조치를 위반하여 어획, 보유, 운반 또는 판매된 수산물의 수입과 교역을 금지하고 있음
- 어획(생산)~미국 반입 전까지 관련된 주요 데이터 제공·보고 의무를 미국 정부에 등록된 수입 업체²⁾에 부과
- 해양어업청은 등록된 수산물 수입업체가 수입 수산물의 생산부터 통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역추적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산물의 수입 금지 가능

2) 미국 세관 규정에 따라 수입을 책임지는 업체로, 해양어업청이 발행한 국제수산물무역허가서(International Fisheries Trade Permit: IFTP)를 보유해야 함

'18년 이후 13종 수산물의 對美 수출, 생산~미국 반입 전 과정 정보 제공 필요

■ 미국 수입업체, 수입 수산물의 생산(어획·양식)부터 미국 반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 제출 의무화

- SIMP의 도입으로 미국 수입업체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수산물의 어획, 양륙, 유통 등에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보고 의무를 부담
-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을 통해 수산물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어획, 양륙 등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입업체는 통관자동화프로그램(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이라는 전자 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수입업체는 어획 시부터 미국 반입 시점까지 수산물·수산제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수입업체가 미국 수입 시 필수적으로 기록(보관),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크게 생산자, 수산물·수산식품의 생산·가공, 수입자 기록 정보 등으로 구분
-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법률과 해설서의 기술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수입 수산물이 생산(어획·양식) 된 이후 미국에 반입되기 전까지 유통, 가공 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도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즉, 미국 수입업체는 수입된 수산물이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했고, 어떤 경로를 거쳐 미국에 반입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관계당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표 1. 미국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집 정보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해설서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Fact Sheet)
<p>① 수산물 어획 또는 생산 주체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 선박의 명칭, 국적, 어업 허가에 관한 증명(Name and flag state of harvesting vessel(s) and evidence of authorization) · 어선 고유 식별 번호가 있는 경우 그 번호(Unique Vessel Identifier(s)) · 어구 종류(Type(s) of fishing gear) · 양식시설 명칭(Name(s) of farm or aquaculture facility) <p>② 생산·가공 수산물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종(ASFIS 코드)(Species of fish(ASFIS code)) · 최초 양륙 시 제품 형태(온마리, 내장 제거 등) (Product form (whole, gilled and gutted, etc.) at point of first landing) · 양륙·운송 시 제품의 수량·중량(Quantity and/or weight of the product(s) as landed/delivered) <p>③ 어획 및 양륙 장소, 시기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 및 양식 지역(Area(s) of wild-capture or aquaculture harvest) · 양식시설 위치(Location(s) of aquaculture facility) · 최초 양륙 지역(Point of first landing) · 최초 양륙·양식 생산 일시(Date of first landing or removal from aquaculture facility) · 해당 수산물 수탁자(가공업자, 판매업자, 어선 등)의 이름·명칭(Name of entity(ies) (processor, dealer, vessel) to which fish was landed) <p>④ 국제수산물무역허가 번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에 지정된 NOAA 해양어업청의 국제수산물무역허가(International Fisheries Trade Permit, IFTP) 번호 	<p>① 생산자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명칭, 어선 국적(Name and flag state of harvesting vessel(s)) · 어업 허가 증명(Evidence of authorization to fish(permit or license number)) · 어선 고유 식별 번호(있는 경우)(Unique vessel identifier(when available)) · 어구 종류(Type(s) of fishing gear) <p>② 수산물 정보 - 무엇을, 언제, 어디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종(ASFIS 코드)(Species of fish—Scientific/Acceptable market name(ASFIS three-alpha code)) · 어획 또는 양식 생산 일시(Harvest date(s)) · 양륙 시 제품 형태 및 수량·중량(Product form(s) at time of landing including quantity and weight of product) · 어획 및 양식 지역(Area(s) of wild-capture or aquaculture harvest) · 최초 양륙 지역(Point(s) of first landing) · 해당 수산물 수탁자명(Name of entity(ies) to which the fish was landed or delivered)
<p>④ 국제수산물무역허가 번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에 지정된 NOAA 해양어업청의 국제수산물무역허가(International Fisheries Trade Permit, IFTP) 번호 	<p>③ 수입자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소속, 연락처(Name, affili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 국제수산물무역허가 번호(NOAA Fisheries issued international fisheries trade permit(IFTTP) number) · 상기 유통과정의 이력 정보(Importer of record is responsible for keeping records regarding the chain of custody detailed above) · 수산물 환적 정보(Information on any transshipment of product(declarations by harvesting/carrier vessels, bills of lading)) · 가공, 재가공, 혼합 관련 기록(Records on processing, re-processing, and commingling of product)

자료: Federal Register,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81 Fed. Reg. 88975, 2016.12.09., U.S. NOAA Fisheries,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Fact Sheet, 2016.12.08.를 참고로 저자 작성

- 2018년부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수산물은 전복(Abalone), 대서양대구(Atlantic Cod), 대서양꽃게(Blue crab(Atlantic)), 만새기(Dolphinfish(Mahi-mahi)), 바리류(Grouper), 왕게(King crab(red)), 태평양대구(Pacific Cod), 통돮(Red snapper), 해삼(Sea cucumber), 상어류(Sharks), 새우(Shrimp), 황새치(Swordfish), 참치류(날개다랑어(Albacore), 눈다랑어(Bigeye), 가다랑어(Skipjack), 황다랑어(Yellowfin), 참다랑어(Bluefin))의 13개 품종임
- 단,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대상 중 전복은 미국산 전복에 대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적용이 현재 시점까지는 곤란할 것으로 평가되어 시스템이 구비될 때까지 제도 적용이 유예됨
- 또한 대상 수산물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가공된 고차가공품도 제외되었는데, 어류, 연육, 소스, 피쉬스틱, 어묵, 연육가공품 등이 이에 해당됨

우선 적용 대상 어종의 對미 수출업체, 세부 정보 제출에 대한 대비 요구

■ 프로그램 적용 대상 수산물의 수출실적, 對미 수출의 7% 수준

-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동향을 보면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대상 품목의 수출 실적은 1천 6백만 달러로 對미 수산물 수출액의 약 7% 수준(2014~2016년 기준)
- 우선 대상인 어종의 세부 품목별 수출 실적(3년 평균)을 살펴보면 참치는 냉동피레트(참다랑어 제외)³⁾ 수출이 5,502천 달러로 전체 참치 수출액의 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밀폐용기(기름 담금) 2,378천 달러(23%), 참다랑어 피레트 1,229천 달러(12%) 등의 순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이 미국으로의 참치류 수출의 90%를 차지하며, 황새치 수출액은 연간 2천 달러 내외임
- 제도 적용 대상으로 추정되는 게류의 수출 실적은 약 4,220천 달러로, 활·신냉 기타게가 3,722천 달러(88%), 냉동왕게 189천 달러(4%), 기타 게조제품(게살 제외) 158천 달러(4%) 등의 순서임
- 새우는 새우젓같이 304천 달러, 건새우(냉수성 새우 제외)가 303천 달러이며, 이외 해삼과 전복이 각각 387천 달러, 334천 달러에 이름

3) 2016년 기준 對미국 수출 검사 실적(HSK 0304-87-9000)을 통해 세부 품목명을 조사한 결과 냉동피레트의 대부분이 날개다랑어로 조사됨(전체 검사 실적의 99.9% 차지)

표 2.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대상 품목의 對미 수출 실적

(단위: 천\$,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평균	
					금액	비중
수산물		217,067	231,763	241,261	230,030	100.0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대상 품목	소계	15,415	16,475	15,990	15,960	6.9
	참치	11,085	9,753	9,650	10,163	4.4
	새치	0	6	-	2	0.0
	게류	3,026	4,908	4,727	4,220	1.8
	새우	666	811	705	727	0.3
	해삼	310	425	424	387	0.2
	전복	157	453	392	334	0.1
	대구	83	42	22	49	0.0
	돔	88	77	70	78	0.0

- 주: 1) 對미 수출 수산물 중 제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집계함
 2) 2014~2016년 미국 수출 실적이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종 분류는 KMI 자체 기준에 의거함
 3) 전복은 시행일이 연기된 품목임
 4) 게는 꽃게, 왕게, 기타게 등을 포함함
 5) 참치는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기타다랑어를 포함함
 6) 새우는 새우, 새우살, 새우젓갈 등을 포함함
 7) 대구는 대구류, 기타대구류를 포함함
 8) 돔은 스파리대과 이외 돔류, 기타돔을 포함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교역 원자료(2017.7.1)

■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정보·기록물 관리 필요

- 현재 품목 중에서는 참치(새치 포함) 수출이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나, 국내의 ‘조업감시시스템(Fisheries Monitoring System, FMS)’과 ‘어획증명서’를 통해 모니터링 제도에서 요구하는 상당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이처럼 대상 품목의 경우 국내 수산업에 관련된 각종 허가·등록·증명서나 원산지증명서 등을 활용해 정보의 일정 부분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에도 원료입고확인서, 적하목록, 계산서, 선하증권, 운송장 등 업체의 거래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표 3.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수산업 관련 각종 허가·등록·증명서 수록 정보

구분	세부 정보	육상 해수 양식 어업 허가증	어업 면허증	원양 어업 허가증	어획 증명서	원양 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해외 양륙 결과 보고서	전재 결과 보고서	포획 채취 실적 보고서 (TAC 어종)	어업 신고서
생산자 정보	어선 명칭			○	○	○	○	○	○	
	어선 국적			○	○					
	어선 고유 식별 번호			○	○	○		○	○	
	어구 종류			○			○		○	○
	양식장 명칭	○	○							
생산·공 수산물 정보	FAO ASRS 알파벳 코드					○	○			
	최초 양륙 시 제품 형태					○	○	○	○	
	양륙 또는 운송 시 제품 수량 및 중량				○	○	○	○	○	
어획·양륙 장소 및 시기 정보	어획/양식 지역	○	○	○	○	○	○			○
	양식시설 위치	○	○							
	최초 양륙 지역				○	○	○		○	
	최초 양륙/양식 생산 일시				○	○	○		○	
	해당 수산물 수탁자 명칭				○	○		○		

주: ○는 허가·등록·증명서가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구 정보에 해당하거나 상응하는 내용을 수록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률 참조

■ 비계통 출하 비중이 높은 대상 수산물, 누락 정보의 확보·관리 필요

- 우선 적용 대상 수산물 중 비계통 출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경우 세심한 대응 요구
- 대상 수산물 중 해삼, 전복, 새우의 경우 비계통 출하 비중이 높아 기록물 확보·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대구, 꽃게, 해삼, 새우, 전복은 수산물이력제 등록 품목으로, 수산물이력제의 정보 등록 방식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음

표 4.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우선 품목의 우리나라 생산 및 비계통 출하 동향

(단위 : 톤)

구 분		2015년		2016년		우선적용어종
		소계	비계통 비중	소계	비계통 비중	
대 구		11,356	33%	8,560	43%	Pacific Cod, Atlantic Cod
전 복		10,235	98%	12,436	98%	Abalone
해 삼		2,211	57%	2,113	49%	Sea cucumber
상 어		1,375	83%	651	67%	Sharks
능성어(바리류)		163	62%	262	62%	Grouper
돔	소계	18,886	61%	15,018	49%	Red snapper
	통돔류	28	100%	50	100%	
새 치	소계	4,368	100%	4,114	100%	Swordfish
	황새치	1,836	100%	1,485	100%	
참 치	소계	319,024	99%	332,984	99%	Albacore, Bigeye, Skipjack, Yellowfin, Bluefin
	가다랑어	238,732	100%	244,303	100%	
	황다랑어	52,940	100%	60,594	100%	
	눈다랑어	22,398	100%	22,057	100%	
	날개다랑어	1,204	100%	1,895	100%	
	참다랑어	722	0%	1,031	0%	
	남방참다랑어	931	100%	998	100%	
	북방참다랑어	-	-	139	100%	
	기타다랑어류	2,097	45%	1,967	46%	
새 우	소계	28,524	30%	34,386	27%	Shrimp
	젓새우류	11,730	5%	17,521	12%	
	흰다리새우	5,515	100%	5,791	100%	
	꽃새우	1,651	4%	1,804	4%	
	중하	560	31%	918	25%	
	대하	594	31%	666	27%	
	보리새우	76	36%	556	11%	
	닭새우류	615	0%	508	0%	
	새우류	241	100%	120	100%	
	기타새우류	7,543	22%	6,502	13%	
게	소계	67,043	64%	58,398	64%	Blue crab(Atlantic), King crab(red)
	붉은대게	41,647	82%	36,180	85%	
	꽃게	16,374	24%	13,558	29%	
	민꽃게	3,425	54%	4,264	29%	
	대게	1,915	26%	1,572	22%	
	게류	1,198	100%	656	100%	
	기타게류	2,484	41%	2,168	39%	

주: 1) 대상어종 중 만새기(Dolphinfish(Mahi-mahi))는 제외되었음

2) 전복은 시행일이 연기된 품목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일부 정보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수산물 성격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정보의 체계화 요구
- 일례로 업계에서는 수산물 종류에 따라 어선 명칭, 어획·양식 지역 등은 어종의 조업 특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구체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함
- 국가별 생산·유통 환경 등의 차이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의 대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련 정보를 구비해야 하며, 이에 더해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서류의 수집·보관·관리에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됨

수산물의 이력 정보 관리 강화 등 체계적 대비 요구

■ SIMP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준비 필요

- 미국 해양어업청은 2018년부터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에 있어 우선 적용 대상 수산물 리스트를 발표했으나, 향후 가능한 한 모든 수산물로 동 규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⁴⁾
- 對미 수출 수산물에 대한 생산부터 미국 반입 전 전 과정별 정보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세계 교역의 이념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측의 규제 확대·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국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별 정보를 기록·등록하는 수산물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 등의 적극 활용과 함께 비계통 출하가 많은 품종 등에서는 사전적 대비 필요

■ 수출용 수산물에 대한 정보 관리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유통 정보의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수출용 수산물의 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도 적용을 받는 수급범자들이 이행 주체가 되어 스스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검토 요구

4) 81 FR 88975(2016. 12. 09), p.88976, Comment 1

- 참고로 미국 FDA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내 각종 규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자국 수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제 도입 시 각종 매뉴얼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수급범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매뉴얼의 도입,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용을 통해 수산업계의 자발적 대응 능력을 고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류터널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자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알뜰마트,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구분	제목	발행일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북방경제 협력 기회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가미 확산 우려,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5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2017.10.25

URL : <http://www.kmi.re.kr/>